

체코의 경제체제전환과 시사점

2006. 3.

주OECD 대표부

목 차

1. 문제의 제기	1
2. 체코의 경제체제전환 추진	2
3. 부문별 경제체제전환정책의 주요내용	10
4. 국영기업의 민영화	17
5. 경제체제전환에 따른 변화	24
6. 체코 경제체제전환의 시사점	28
<참고1> 체코 개관	31
<참고2> 체코체제전환 연표	32
<참고3> 최근의 경제동향	33

1. 문제의 제기

□ 체코는 1989년 벨벳혁명 이후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급속한 경제개혁을 추진한 바, 경제성장의 회복, 낮은 인플레이션, 안정적 환율, 경상계정 흑자 및 균형재정을 유지하는 등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 벨벳혁명: 89년11월16일 학생,시민의 시위로 발단하여 12월29일 하벨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공산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정부를 세운 체코 무혈혁명을 지칭
- * 체코는 2차대전 이전 선진산업국가로 간주될 만큼 공업화에 앞서 갔으나 2차대전 이후 계획경제체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의 상실, 생산성과 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
- * 체제전환 초기에는 마이너스 성장(91년 Δ 11.5%)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CMEA의 해체와 체코슬로박 연방의 분리로 악화

○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타 동구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양호한 경제성과를 보여, 동구권 국가 중에 가장 먼저 OECD에 가입하였으며, 2004년에는 유럽연합(EU)에 가입함.

□ 체코의 경험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국가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시장경제전환을 미리 대비해야 하는 우리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독일통일의 경우 동서독의 경제수준과 남북한 경제수준의 격차, 통독이후 독일의 정책실패사례 등에 비추어 독일사례가 우리에게 반면 교사는 될 수 있으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

○ 그보다는 독자적으로 시장경제체제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체코 등의 사례가 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2. 체코의 경제체제전환 추진

가. 체제전환 이전의 경제상황

-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제수준은 독일, 프랑스, 벨기에 및 오스트리아와 견줄 수 있으며, 이 시기의 산업통계에 따르면 체코는 가장 산업화된 10개국 중의 한 국가였음.
- 그러나 2차 대전이후 1989년에 이르는 시기에 시장메커니즘이 아닌 중앙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으로 인해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함께 생산성 및 생활수준의 상당한 저하를 초래하였음.
- 특히 동구의 역내경제공동체인 CMEA(경제상호원조회의)의 해체는 이미 쇠퇴국면에 접어든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킴. 이러한 상황 하에서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은 과거의 문제점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등장
 - * CMEA(COMECON) : 공산권 경제상호원조회의로서, 미국의 마셜 플랜에 대하여 1949년1월 결성된 공산 각국 간의 경제협력기구(가맹국은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동독, 몽고, 쿠바, 베트남 등 10개국)
 - * 80년대 성장률은 마이너스 내지 제로로 추정되며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중앙계획경제와 CMEA내의 분업구조에 따른 산업구조의 왜곡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 1980년대 경제침체는 80년대 이전과 비교해볼 때 더욱 심화됨. 즉 평균 GDP 성장률은 4.8%에서 1.5%로 하락하였으며, 반면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임.
 - * 공식통계자료에 따른 실질경제성장률은 과대평가되었으며, 실질 물가상승률 추정치를 감안하면 70년대 실질 성장률은 공식성장률의 절반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며, 8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거나 제로성장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됨.

<표1> 체코슬로박의 거시경제 지표

지 표 (경상가격기준)	연평균성장률(%)	
	1970-1980	1980-1990
GDP	4.77	1.50
개인소비	3.22	1.69
총 투자	5.77	0.89
소비자물가	1.14	2.17
평균명목임금	3.13	2.08
평균실질임금	1.99	-0.09
노동생산성	4.48	1.65
숨겨진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지표		
GDP	2.7	-0.7
개인소비	1.5	0.4
총 투자	2.1	-5.1
소비자물가	2.8	3.5
평균실질임금	0.3	-1.4

자료: Ivan Sujan and Milota Sujanova, The Macroeconomic Situation in the Czech Republic, p.17

- 체코산업구조의 왜곡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 체코의 경우는 경제수준과 국가규모에 비추어 볼 때 광업, 금속, 기계, 교통장비 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식료품, 가구, 인쇄, 에너지 산업분야의 비중은 매우 낮음
 - 이러한 산업구조는 자연적 여건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중앙계획경제와 CMEA내의 분업구조에 따른 것임.

- 이러한 여건하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추진된 바, 공산권의 붕괴에 따른 전통적 수출시장의 상실 및 낙후된 생산 설비로 인해, 전환에 따른 경기침체(transformation recession)는 불가피

□ 다만 여타 동구권국가와 비교시 체코의 체제전환의 초기 여건은 양호

- ① 산업발전의 전통: 1차 세계대전 이전과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체코지역은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Austro-Hungarian monarchy)의 산업의 중심지
 - 1930년대 후반에는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오스트리아를 능가하였으며, 세계 15위에 이름
- ② 독일과 인접한 지정학적 위치
- ③ 유럽의 주류국가(mainstream)로서의 역사가 체제전환정책의 채택을 비교적 용이하게 만듦.
 - 과거의 높은 생활수준과 국민들의 높은 적응력은 일시적 생활수준 저하를 감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 ④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상태 유지
 - 89년 GDP대비 부채비율이 14.9%로 헝가리(71.3%), 폴란드(58.8%)에 비해 현저히 낮음

<표2> 총대외부채(1989년기준)

	총대외부채(10억달러)	GDP대비 부채비율
체코슬로박	7.9	14.9
헝가리	20.4	71.3
폴란드	41.5	58.8

자료: Martin Myant의, Successful Transformations? pp.100

나. 경제체제 전환의 추진과정

(1) 체제전환의 필요성

-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시장경쟁의 부재로 인해 본질적으로 혁신기능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계획체제의 관료주의적 경직성 및 폐쇄적인 대외경제관계로 인해 더욱 가중되었음.

 - 사회주의 국가들이 초기 공업화시기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주로 국민경제 내의 유희자원을 중앙계획과 통제를 통해 신속히 동원함으로써 달성되었으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예외 없이 투자의 한계효율 및 경제성장의 지속적인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했음.
 - 이로 인해 1970년대부터 구동구권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어 1980년대 하반기에 이르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타날 정도로 악화되었음.

- 이미 1960년대부터 구동구권 각국에서 여러 차례 경제개혁이 추진된 바 있으나, 계획경제체제라는 틀을 유지한 채 경제주체들의 생산의욕을 증대하려는 사회주의적 경제개혁으로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하락세를 막을 수 없었음.
-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이후, 각 국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정치적 변혁 이후에 구동구권 국가들에서 비로소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음.

 - 사회주의권의 종주국이었던 구소련이 동구 국가들에 대한 정치·군사적인 간섭의 포기를 선언한 것이 각국에서 연쇄적인 정치적 변혁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제공함.

(2) 경제체제전환의 추진과정

□ 대부분의 구동구권 국가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폐기와 서구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을 경제개혁의 목표로 설정

○ 그러나,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구체적인 모델설정에 차이가 존재하였음.

□ 경제체제전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추진된 기본정책은 다음과 같음.

□ 경제체제전환 과정에서 추진된 기본정책은 다음과 같음.

①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계획과 통제의 폐지(경제자유화)

- 모든 교역재(tradeable goods)와 합리적 경쟁상황 하에서 생산되는 비교역재를 포함한 광범위한 가격자유화

* 1991년 가격자유화: 주택·에너지·공공교통을 제외한 전면적 자유화 실시

- 코로나화의 국내 태환성 도입과 수요와 공급에 반응하는 단일한 환율의 확립

- 대부분의 자본계정(capital account) 항목을 동시에 자유화

* 이는 체코가 체제전환국 중 가장 먼저 OECD에 가입(1995년 12월)하는데 기여

- 시장개방도 전면적으로 진행

* 91년 평균 관세율은 유럽공동체 국가들의 제3국에 대한 관세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② 체제전환기의 거시 경제적 불균형의 해소(경제안정화)

- 재정·통화긴축과 적절한 환율, 가격, 임금정책 등을 통한 긴축적 거시경제정책 이행

- 1991년 상반기에 추진된 재정·통화정책은 지나치게 긴축적인 것으로 나타나, 91년 하반기에는 국내외 수요 촉진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수정이 이루어짐.

- ③ 생산수단의 국유제 폐지 및 사유제도 도입(민영화)
 - 국영기업의 구조조정도 동시에 추진
- ④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 제도 및 조직의 구축(시장인프라의 구축)
- ⑤ 개혁추진과정에서 실직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경제의 생산·소비·투자 등의 애로요인 타개를 위한 경제 안전망의 구축 (사회안전망, 경제안전망의 구축)
 -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원조달 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체코는 재정상태가 비교적 양호

다. 체제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

(1) 경제체제전환의 진행순서 (sequencing)를 적절히 관리 함으로써 체제전환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

- 제1단계: 과거 제도와 규범의 붕괴로 시작으로 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개혁조치들의 신속한 이행에 적합한 시기
 -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간섭을 종식 : 제1단계 이후에는 새로운 압력단체의 등장으로 경제자유화 조치가 어렵거나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어 충격요법(shock therapy)이 효과적

- 각종 보조금의 철폐, 재정흑자 달성과 신중한 통화정책 등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 필요
 - 거시경제안정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급속한 인플레이가 경제개혁과 사회 안정을 저해할 우려

- 제2단계: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급속히 상승하나, GDP의 하락에 이은 생활수준의 저하로 국민적 단합이 약화되는 시기
 - 경제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 캠페인이 필요
 - 체제전환으로 생활여건이 악화된 국민들을 위한 합리적 사회정책을 정치·경제 개혁조치와 병행
 - 통화팽창을 절대적으로 억제하고, 고정환율 유지 및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신속히 진행
 -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
 - 시장경제체제에 상응하는 법률적·제도적 뒷받침 필요 (법과 제도가 관행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담당토록 하되, 지나치게 앞서갈 경우 경제주체들의 수용에 한계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제3단계: 취약한 정치·경제 및 시장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시기로 새로운 제도의 심화·확대가 필요
 - 체코는 성장보다는 안정화(stabilization)에 중점을 두고, 거시경제의 안정과 민영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체제전환 정책을 추진

- 긴축적 거시경제정책의 적용을 통해 1991.1.1 가격자유화(전체가격의 85%를 대상으로 시행됨)에 의해 야기된 물가상승압력을 신속하게 완화시키는데 성공함.
 - * 이후 추가적으로 10%의 가격을 자유화하면서 3-6개월 만에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물가안정을 유지한 것은 매우 성공적
 - * 정부통제의 철폐, 가격자유화, 은행신용의 제공, 수출회복에 따른 민간부문의 발전도 성공적임.

□ 체제전환 초기의 경기침체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는 등 어려움이 컸으나, 국민들의 극복의지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극복

- * 경기침체의 원인은 CMEA의 해체에 따른 외부 충격과 긴축적 경제정책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강력한 시장경제 도입정책은 교육, 보건, 연구개발(R&D), 주택건설 및 인프라 건설 등에 대한 국가지원의 중단을 야기하여 중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이러한 경기하락에도 불구하고 체코정부가 체제전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체제전환에 따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고자 하는 체코 국민의 의지에 힘입은 바 크며, 이는 과거 주요산업국가로서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

3. 부문별 경제체제전환정책의 주요내용

가. 안정화 정책(Stabilization)

- 1991년 1월 체코는 가격 및 대외 무역 자유화 조치와 함께 안정화 조치를 실시함.
 - 자유화 조치는 시장작동을 위한 환경 조성의 첫 단계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화폐공급과 국내수요 억제를 통해 통제
 - 평가절하를 통해 대외균형 유지
 - 안정화 조치 시행에 있어 체코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상당 부분 상대적으로 유리한 초기여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 안정화조치의 성공 여부는 30% 미만의 인플레이션 및 5% 미만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년도 수의 비교를 통해 측정(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 또한, 성장위주의 정책보다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통한 안정화 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함. (anti-inflationary prioritization)
 - 안정화 조치들은 체제전환 기간 중 생산저하의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1994년경부터는 회복세를 보임.
 - 이에 따라, 체코정부는 1992년 경제개혁정책의 중점을 안정화 정책에서 구조조정과 성장으로 조심스럽게 전환
 - 그러나, 체코의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은 낮은 인플레이션, 안정된 통화, 중·동구 유럽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과 재정적자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그러나, 국영기업들이 기업상호간 대출에 의존함에 따라, 긴축 정책의 영향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
- 이러한 기업간 대출에 의한 부채는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긴축적 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에 의해 기업이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표3> 체제전환기 체코의 주요경제지표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GDP성장율(%)	-1.2	-11.5	-3.3	0.6	2.7	5.9	3.9
물가상승율(%)	9.6	56.6	11.1	20.8	10.0	9.1	8.8
재정수지 (GDP대비, %)	-0.2	-1.9	-3.1	0.5	-1.1	-1.8	-1.1

자료: Czech Republic: Facing Reality (CERGE, 1998), Transition Report (EBRD,1999)

나. 투자자원조달

- 1994년 이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투자증가에 기인함.
 - 1991년 이래 실질임금의 상승으로 소비가 증가 하였으나, 소비는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보조적 역할에 그친 것으로 평가
- 체코는 노동생산성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으로 투자재원의 조달에 유리한 면이 있었으나 구조조정 및 인프라 구축 등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음.
 - 총 고정자본 형성은 1994년 기준으로 GDP의 30% (1995년 32.2%로 증가)에 달하여, 여타 CMEA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경제재건과 현대화를 위한 수요를 감안하면 외부투자유치가 필요

- 바우처 방식의 민영화와 소유권 회복조치 등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증가도 소비축진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충분한 투자재원의 조달에는 미흡
 - * 1995년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은 독일, 오스트리아 등과 비슷한 수준인 10~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자산매각 수익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 기업들은 높은 법인세, 가격자유화 이후 감가상각 계상 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과세액 증가 등으로 기업이익을 투자재원화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다. 해외자본 유입

- 체코로의 자본유입은 '98년 25억불(GDP의 2.5%에 해당)로 CMEA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장기투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이는 체코의 안정된 정치·경제 환경과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등 해외투자 유치에 유리한 조건에 기인하며 저평가된 환율과 이자율도 단기 투자자본유입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표4>체코의 외국인투자추이

	1992	1993	1995	1998
외국인투자(백만불, 국제수지기준)	983	552	2,526	2,485

자료) EBRD

- 체코정부는 해외자본 유입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불태환정책(Sterilization)을 채택하여 이자율과 준비금을 인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높은 명목이자율('94-'95년간 13%)도 단기 투기자본의 유입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라. 평가절하

- 체제전환 초기에 자국화폐에 대한 평가절하를 단행하였으며, 이는 수출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급속한 경제개혁 초기에 긴축적 거시경제정책과 통화의 평가절하가 필요한가의 여부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나, 체제전환기의 중기적 거시경제안정을 위해서는 낮은 임금과 평가절하는 체제전환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쿠션역할(two cushions)을 한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쿠션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안정, 경화(hard currency) 보유증가 등을 통해 경제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새로운 기업에 경쟁력(breathing room)을 제공
- 강력한 안정화 정책을 실시로 평가절하의 함정(devaluation trap)의 회피가 가능하였으며, 실질임금도 지속적으로 상승
 - * 체제전환 초기 5년 동안 체코화폐에 대한 명목환율은 급속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하지 않음.
 - * 실질실효환율(REER)은 91년 가격자유화 조치 이후 급속히 상승하였으며, 조세 개혁과 부가세 도입 이후 추가로 상승함.
- 평가절하는 수출촉진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비교우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
- 평가절하는 단기적으로 대외무역의 균형달성과 무역흑자(91년 250억 Koruna) 시현에 기여
- 94년 6월 이래 대외무역적자를 시현함에 따라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는 평가절상이 필요하나, 대외균형 달성을 저해하는 딜레마에 직면
 - * 무역적자는 체제전환 이후 GDP의 빠른 성장과 95-95년간의 평가절상에 기인함.

- 94년 이래 무역적자 시현으로 수출업자 등으로부터 환율인상 압력이 있었으나, 낮은 실업률, 해외직접투자의 유입 등으로 수출촉진을 위한 환율인상의 절박성이 크지 않아 점진적 평가절상 가능
- 96년2월 명목환율에 7.5%의 변동 폭 도입

마. 대외무역

- 체제전환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는 교역대상국의 변화로 나타나 독일이 소련 등 동구 국가들을 대신해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등장
- 독일이 전체 수출의 35%, 수입의 26%를 차지(1995년 기준)
 - * 체제전환 이전에는 구소련 등 계획경제 국가들과의 교역이 전체교역의 약 3분의 2를 차지
- 체제전환 이후 대부분의 중·동구 국가들의 수출품 중 원자재와 중간재의 비중이 높아짐.
- 94년 이래 무역적자 폭이 증가: 91~94년간 수출은 연11% 증가한 반면 수입은 연 14% 증가(이 기간 동안 자본계정의 흑자로 대외균형 유지)
 - 경기회복에 따른 국내소비 수요 증가
 - 수입의 소득탄력성 증가
 - 코루나(Koruna)화의 평가절상
 - 다국적기업의 시장개척 노력

바. 인플레이션

- 물가상승률은 가격자유화로 91년 56.6%로 최고를 기록한 후 연 9%전후로 안정화
 - * 연료, 대중교통, 주택가격의 점진적 자유화에 따라 91~94년간 연 1~2% 정도 물가 상승하였으며, 93년1월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한 달 만에 물가가 8.5% 상승
 - * 이러한 점진적 가격규제완화 및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은 8% 미만임.
- 주택시장 등 새로 형성된 시장의 가격 프로세스,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격차 등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 체코의 경우 국민들의 체제전환의 진전과 통화안정에 대한 신념에 따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적은 편임.

<표5> 물가상승율 추이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물가상승율(%)	9.6	56.6	11.1	20.8	10.0.	9.1	8.8

사. 경제개혁과 외부요인의 영향

- 체제전환 초기의 경기침체는 CMEA의 해체와 다른 외부적 요인에도 원인이 있음.
- 외부적 충격은 실업의 증가, 소비 및 투자의 감소 및 수출 감소 수입증가에도 영향을 미침
-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 분리의 영향
 -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의 분리는 체제전환 초기의 경기후퇴에서 회복조짐을 보이는 시기에 이루어져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모두에 영향을 미쳤으나, 슬로바키아에 비해 체코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됨.

- * 이는 1993년 3분기 동안 슬로박의 경우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체코의 경우 재정흑자를 시현한 바, 국가분리의 상대적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음.
- * 1992년 250억 코루나(슬로박 GDP의 7%에 해당) 상당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o 슬로박 분리에 따른 부담

- ① 신규화폐 발행, 행정부의 분리, 국유재산 분할 등에 따른 부담
- ② 양국가간 거래가 내부거래에서 국가간 교역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부담
- ③ 양국간의 자원이전(transfer of resources)의 중단: 2차 대전 이후 전 기간에 걸쳐 체코에서 슬로박으로 이전이 이루어짐.

o 전체적인 국가분리의 영향은 상기와 같이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체코의 경우 약 -2.1% 슬로박의 경우는 -5.7%로 추정됨.

- * GDP의 감소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으나 체코와 슬로박의 국가분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표6> 개혁과 여타 요인들의 체코슬로박경제에 대한 영향(1991년)

지 표	총변화 (90-91)	CMEA 붕괴의 영향	경제개혁의 영향			
			총계	가격 자유화	평가절하**	긴축정책
연간 변동율(%)						
실질GDP(%)	-15.1	-5.8	-9.3	-5.1	+2.4	-6.6
실질민간소비(%)	-23.9	-4.3	-19.6	-10.1	-4.4	-5.1
실질고정자산 투자(%)	-31.8	-3.9	-27.6	-4.1	-9.8	-13.9
소비자물가상승율(%)	+57.9	+6.0	+51.9	+49.3	+15.1	-12.5
<u>Annual absolute changes:</u>						
경상수지(10억불)	+1.7	-2.9	+4.6	+0.5	+3.4	+0.7
실업율 (%)	+5.6	+2.2	+3.4	+1.9	-0.9	+2.4

*/ 걸프전과 세계무역침체 등 외부충격요인 포함

**/ 무역자유화조치 포함

자료: Ivan Sujan and Milota Sujanova, The Macroeconomic Situation in the Czech Republic, p.19

4. 국영기업의 민영화

- 국영기업과 협동조합(cooperatives)은 1985년 국민생산의 97%를 차지하는 등 생산에 있어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여 민영화의 성공여부가 체제전환의 핵심사항
 - 체코는 국영기업에 새로운 민간소유자를 빨리 찾아 주고, 더 많은 경쟁을 도입을 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방식으로 신속한 민영화를 추진
- 민영화는 주로 소유권반환, 경매, 협동조합의 전환, 자치단체에 대한 재산이전, 바우처 방식 민영화의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 ① 소유권 반환(restitution) : 공산체제 하에서 빼앗긴 소유권을 원소유주에게 반환
 - 90년말~91년 중반까지 공산정권 수립후의 수용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반환
 - 대상 자산은 상점, 주택, 농토 등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
 - ② 경매(auction): 주로 공기업에서 분리된 소규모 상점, 음식점, 서비스업 등을 경매(auction)을 통해 민영화
 - 현재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한 특별지위 부여는 없었음.
 - 매각대금은 국가재산기금(National Property Fund)에 입금
 - ③ 협동조합의 전환
 - 협동농장, 소매상 등에 적용
 - ④ 자치단체에 대한 무상 재산이전
 - 1991년에 6,000개 자치단체에 3,500억 코루나의 재산을 일괄이전

⑤ Voucher 민영화

- 대규모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위해 주식을 국민들에게
 영가 또는 무상으로 분배(판매)하는 바우처(쿠폰의 일종)를
 보급 (600만명 수혜)

□ 초기에는 주로 소유권반환과 경매, 협동조합 전환 등 소규모
 재산과 소규모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이후
 점차 대규모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실시

- 대규모 민영화도 공매, 공개입찰, 직접판매, 주식분배를 통한
 민영화(바우처 민영화), 무상이전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
 하여 신축적으로 운영
- 그중, 주식분배를 통한 바우처 민영화를 가장 일반적인
 민영화 방식으로 활용
 - 건수로는 총 7,533건중 1,777건(23.6%)을 차지
 - 금액으로는 93년12월까지 바우처 민영화가 7,542억 코루나로
 86.5%을 차지 (총누계 8,715억 코루나)

<표7> 91년이후 93년12월까지의 민영화 방식별 건수및 금액

	총계	바우처 민영화	경매	경쟁입찰	직접판매	무상이전
누계건수(건)	7,533	1,777	514	502	2,422	2,318
(비중, %)	100.0	23.6	6.8	6.7	32.2	30.8
누계금액 (10억코루나)	871.6	754.2	6.8	19.2	62.3	30.0
(비중, %)	100.0	86.5	0.8	2.2	7.1	3.4

자료: 체코 민영화부

나. 바우처 민영화(Voucher Privatization)

□ 바우처 제도는 공산체제하의 특권계층(nomenklatura)을 기업경영에서 배제하고 민영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외국자본의 주요기업에 대한 지배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바우처(주식교환권)를 일반국민에게 무상보급(또는 염가판매)하여 일반대중의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임

□ 추진과정

○ 바우처 민영화는 '92.5월-12월의 1단계와, '93-'94년 1월의 2단계로 나누어 진행

○ 1991년 민영화부(Ministry of Privatization)는 민영화 대상 4338개 기업의 목록을 발표(대상기업의 자산가치는 1조 2천억 코루나)

- 현 경영진은 공기업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91.11월 까지 제출토록 의무화 (바우처대상 기업은 기본 계획에 바우처 민영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대상 주식수를 명시하도록 함)

- 다른 경쟁자는 공기업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민영화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 경영진이 제출한 계획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시한(92.1.10)을 늦추어 유리한 조건을 제공

○ 92년 4월 민영화부에서 민영화 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소유권이 국가재산기금(Fund of National Property)으로 이전됨

- 국가재산기금이 매각조치, 재산양도, 매각수입 징수, 재산권 행사 등을 담당

○ 4,338개 대상기업에 대한 23,607개 민영화 계획 접수

-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1,000 코루나 (35미불 혹은 평균 주급에 해당)상당의 바우처 구입을 통해 참여 가능

- 1차 단계로 92.5-12월 사이 988개 기업 주식매각
- 2차 단계는 93년 중반 완료계획이었으나 슬로바키아와의 분리로 94.1월 종료되었으며, 676개 기업주식 매각

□ 투자민영화펀드(IPFs)의 참여

- 바우처방식을 통해 민영화된 기업의 주식이 지나친 분산으로 인한 경영권 공백발생(control vacuum)을 우려하여 투자민영화펀드(IPFs)들의 참여를 허용
 - Fund 관리자는 투자대상기업의 재정정보를 입수 등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 자본시장 형성에 기여하고 조기투자에 발생하는 수익을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민영화에 참여하는 일반국민들은 바우처 포인트를 펀드에 기탁하고 펀드는 기업 포트폴리오를 구성(각 펀드가 소유하는 주식은 회사주식의 20%를 넘지 못하며, 한 회사의 주식이 펀드포트폴리오 구성의 10%를 넘지 못함)
 - 423개 펀드가 1차 민영화에 참여
 - 상위 7개 펀드가 바우처 포인트의 44.5% 점유, 총 바우처 포인트의 71.5%가 펀드에 할당
- 이러한 펀드의 소유구조로 인하여 펀드의 바우처 민영화 허용의 본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함
 - 1차 민영화에 참여한 400여개의 펀드 중 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펀드는 바우처 포인트를 관리할 재원이나 전문 지식을 가지지 못함.
 - 펀드설립에는 직원, 사무실,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광고만으로 가능

- 대규모 펀드는 시중은행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시중은행은 국가통제 하에 남아있어 국가가 시중은행을 통해 기업을 통제할 여지를 남김
 - 은행이 기업의 소유주와 자금대출자 역할을 겸임함에 따라, 이해충돌 문제(conflict of interest)가 발생함.
 - 상당수 은행들이 악성 채무의 부담을 가지고 있어 부실기업의 청산을 과감히 추진하는데 제약
 - 불완전한 파산관련 법규(bankruptcy law)로 상당수 부실기업이 계속 존속하게 됨.
 - Fund 경영자는 일반 주주보다는 은행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
 - 은행을 통제하고 있는 국가는 대규모 실업발생방지 등 정치적 고려에서 경쟁력이 없는 제품을 계속 생산하도록 허용(경제정책결정에 정치적 요인 도입)
 - 결과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
 - 이러한 펀드들은 서구의 뮤추얼 펀드를 모델로 따랐으나, 기업구조조정의 견인차 역할 등 펀드에 대해 과도한 역할을 기대
 - 기업주식소유제한과 변화를 실행할 레버리지 부족에 기인
 -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여러 개의 펀드가 협력해야 하나, 펀드간 협력이 용이하지 않음. (보통 10개 이상의 펀드가 주식을 소유)
 - 한때 400여개를 넘던 펀드는 2000.8월 45개만이 생존 (펀드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함)
 - 정부는 IPF를 통한 주식집중과 이를 기반으로 한 개혁에 대한 기대로 IPF에 대한 규제를 느슨하게 유지

- 문제점들이 노정되자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설립 등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펀드를 개방형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장에 대한 신뢰와 펀드에 대한 신뢰회복으로 투자가 증가

□ 바우처 민영화의 평가

- 체코의 민영화자체는 대체로 성공적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
 - 98년 총 GDP의 약 75%가 민간부문에서 산출된 것으로 EBRD는 평가(90년 10%, 92년30%, 93년 45%, 95년 70%, 96년 75%)
 - 바우처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에게 일정한 voucher point를 부여하고 이를 주식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신속한 소유권 이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1995년 중반까지 국영기업에서 전환된 주식회사 자산의 약 64%가 바우처 방식에 의해 민영화됨.
 - 투자민영화펀드의 참여는 재산권 확립에는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바우처 펀드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민영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산손실을 축소
 - 다만, 실질적으로 민영화 기업 중 상당수가 진정한 소유자를 찾아주지 못하고 과거 경영자 또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 등 아직 완전히 민영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
- 또한, 97년 체코의 금융위기는 바우처 방식을 통한 기업의 소유자 부재현상으로 구조조정 노력을 게을리 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
 - 민영화 시작이전에 제도적·법률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못했고, 민영화 비율은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IPF의 자격 요건과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Voucher 민영화를 위한 주식비율이 너무 높았던 것으로 평가 (평균 61%)

- 이에 따라, 바우처 방식에 의한 민영화로 실질적인 소유자를 찾아주는 데는 한계와 결함이 있다는 인식아래 94년 이후 바우처 방식을 중단.
 - 소유지분의 급속한 처분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자본형성이 불가능하여 바우처 방식에 의한 민영화를 통해서 자본시장의 출현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 실제로 주식처분이 가능해진 1993년 5월 이래 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95년 5월 600, 그리고 다시 400포인트까지 하락함.
 - 소유권이 무수히 많은 개인에게 분산되어 실질적인 소유권자(active owner)의 출현을 기대하기 어려움.
 - 소유권의 분산현상은 펀드의 출현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어떠한 펀드도 지분의 20% 이상을 취득하기 못하게 규제함에 따라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음.
 - 결과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의 등장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기존의 경영진이 여전히 지배력을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
 - 바우처 방식에 의한 민영화는 사적 이익을 위해 경영진이 제3자와 공모, 부패의 여지를 제공할 위험도 존재
 -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치(증권위원회 설립)가 시기적으로 늦은 것으로 평가
 - 민영화의 문제점 제도적·법적 인프라의 구축없이 서구 제도를 채택

- 반면, 소유권 반환과 경매를 통한 소규모기업의 민영화는 노력한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인구조로 상대적으로 성공

- 결론적으로 국유재산을 단기간 내에 사유화 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국영기업을 민영화를 통해 시장경제의 엔진으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

5. 경제체제전환에 따른 변화

가. 산업구조의 변화

- 체제전환 이후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산업구조의 선진화가 진행
-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89~95년간의 경제 분야별 고용비율을 보면 1960년대 초반~1983년간 서독의 변화와 유사한 변화를 보임.

<표8> 경제 분야별 고용비율 비교

	체 코		슬로바키아		독 일		영 국
	1989	1995	1989	1995	1989	1995	1992
농 업	11.1	5.3	15.0	9.1	3.9	3.7	2.2
산업/건설	47.4	41.9	44.0	38.8	40.2	39.1	30.2
서비스	41.5	52.8	41.0	52.1	56.0	57.2	67.5

자료: SR, 1994, Bulletin CSU, 1994, No.12 and Eurostat Labor Force Survey 1989 and 1992

- 서비스 분야의 확장은 주로 소규모 서비스업의 확장에 기인하며, 서구 선진경제로의 catch-up 과정의 일환
- 체제전환 이전에도 생활수준은 이미 서비스 산업의 확장을 필요로 했으나, 중앙계획 경제체제하의 통제로 인하여 확장이 실현되지 못하고 자유화 조치에 따라 서비스 분야의 확장이 이루어짐.
- 체코의 실업률이 낮은 수준(약3%)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노동의 높은 이동성(mobility)을 보여줌.

- 1995년도 통계에 의하면 43%만이 5년 연속 같은 직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남.
- 체코도 농업 등의 분야에서 실업이 발생하였으나, 주로 연금 수령 노동자(working pensioners)들이 영향을 받음.
- 체코의 낮은 실업률은 구조조정의 지연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유지됨.

나. 기업구조의 변화

중·소 제조업의 증가

- 1989년 산업고용자의 94%가 종업원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였으나, 이 수치는 93년 59%, 95년 50%로 감소
 - * 이 과정에서 대기업은 체코경제에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정부는 경제의 핵심 부문의 유지라는 명분으로 개입하기도 함 (예: Skoda-Plzen)

초소형기업의 증가

- 실업이나 수요측면과의 명확한 연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대부분 빈곤과 실업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초소형 기업활동을 통한 저수입이 90년대 소득 격차 증가의 원인이 됨.

<표9> 체코의 개별기업 수 변화추이

1990년 말	1991년 말	1994년 말
310,653	902,797	846,285

자료: SR, 1991 and 1992, and Bulletin CSU, 1994, No.12

- 92년 가계조사에 따르면 체코의 경우 등록기업자의 6.1%, 슬로박은 3.7%가 자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등록 기업자 수의 절반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창업자금 등의 부족으로 등록만하고 실제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
- 이러한 변화는 체코 체제전환 과정의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다. 수출구조

- 수출시장의 구성에 있어 유럽연합의 비중이 1989년 18.3%에서 1994년 54.9%로 증가함.
- 수출품의 구성에 있어서도 기계류, 교통장비의 비중(89년, 44.4%→94년, 25.8%)이 줄고, 원재료 및 기타 공산품의 비중이 증가
- 대 유럽연합 수출품목에는 큰 변화는 없었으며, 이는 기계 산업의 높은 적응력을 보여줌.

라. 지역간 불균형 문제

- 체코의 경우 산업분포 및 산업화의 효과가 지역별로 고르게 전파되었으며, 이러한 지역적 균형은 체제전환 과정을 통해서도 유지됨.
- 95년 지역별 실업률을 보면 프라하가 0.3%로 가장 낮고, 가장 높은 지역인 Most 지역이 7.3%를 보여, 슬로박, 폴란드 농촌지역의 경우 실업률이 30%에 이르는 등 지역간 편차가 컸던 사실을 고려하면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님.

○ 특별한 지역정책이 없었음에도 전 지역에 걸쳐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균등한 여건 하에서 체제전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던 여건으로는 독일과의 인접성 및 양호한 초기여건 등을 들 수 있으며, 서비스 분야의 성장 특히 관광산업의 성장 및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의 이동성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이러한 체코의 특성은 동구지역의 지역문제를 특징짓는 다음 요인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음.

① 여타 동구 국가들의 경우에는 농촌 실업률이 높았던 반면 체코의 경우는 농촌실업문제는 심각한 편이 아니었음.

② 석탄채광, 제철 등 사양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의 실업문제는 체코에도 해당되었으나, 체제전환 과정에서 원재료 수출증가 및 인근지역과의 노동력 이동 등에 힘입어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음.

③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신산업을 낙후된 농촌지역에 유치함에 따라 해당지역의 고용을 단일 고용주에 의존하게됨에 따라, 이러한 사업장이 폐쇄될 경우 해당지역의 고용상황은 크게 악화

- 반면 체코의 경우는 산업화가 일찍 이루어지고 지역간 교통이 발달하여 서구의 경우와 비슷하게 여러 개의 소규모 기업과 공장이 진출하여 특정 지역의 고용이 단일 고용주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음

6. 체코 경제체제전환의 시사점

(1) 미래에 대한 긍정적 비전의 제시가 필요

- 체제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이상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기존의 제도 붕괴에 따른 공백을 신속히 대체해야 함.
- 이러한 비전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책 이념, 비전을 창조하기 위한 정당의 설립이 필수적임.
- 개혁의 청사진은 각자 서로 다른 선호와 우선순위를 가진 국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작성

(2) 개혁은 초기 정치·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되 단호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

- 경제구조상의 왜곡 및 이에 따른 가격·무역구조의 왜곡정도에 따라 같은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결과는 상이할 수 있음.
 - * 과거 산업발전, 정치적 민주화 경험 등 경제외적인 초기여건도 체제전환의 진행에 영향을 미침
 - * 체코의 경우, 과거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당시의 산업발전 경험과 문화적 자부심이 체제전환 과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
- 따라서 정치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체제전환 정책이 필요함
 - 체제전환은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지만, 순수하게 경제이론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정치·경제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혁은 점진적 방법보다는 개혁초기에 충격요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
 - * 점진적 접근법 : 체제전환의 고비용에 대한 우려에 근거
 - 보조금 삭감과 가격자유화에 따른 인플레이 위험이 상존
 - 기업의 구조조정과 자원의 재배분에 따른 생산감소와 실업이 증가할 위험
 - 점진적 개혁은 경기회복의 속도를 늦춰 결과적으로 총 체제전환비용을 증가시킬 우려

- * 충격요법(shock therapy) : 점진적 개혁은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개혁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험이 있고, 제도변환과 이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개혁의 초기에는 충격요법이 실시되어야 함.
 - 체코의 경우, 1991년초 CMEA 무역체계의 붕괴에 따른 외부적 충격과 더불어 유가상승과 Gulf 사태로 신속하고 전면적 체제전환의 필요성이 컸음.

-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함
 - 체제전환 과정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과거 경제체제와의 단절에서 기인하는 경기침체를 경험하며 전반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3) 체제전환의 진행순서(sequencing)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

- (1단계) 거시정책을 성장보다 안정화에 우선순위를 두어 운영하면서 가격자유화, 상품 및 자본시장의 개방화를 신속히 추진
 - 특히 합리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을 억제함으로써 시장메카니즘이 작동되는 기반을 마련
- (2단계) 체제전환과정의 초기 경기침체에 대비, 경제·사회 안전망을 갖추면서 개혁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는 한편 민영화의 신속한 추진과 시장경제체제에 상응하는 법률적·제도적 뒷받침을 병행
 - 사회안전망 : 체제전환 과정에서 고통을 받는 국민들에 대한 일시적 소득 보전과 점진적 민영화를 위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함.
 - 경제안전망 : 경제의 생산, 소비, 투자가 제약되는 공급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외부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함.
- (3단계) 시장체제에 대한 국민의식의 심화를 위한 캠페인의 지속 및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계속 심화·발전

<체제적 개혁의 십계명>

* 1993.4월 당시 Vaclav Klaus 재무장관이 The Group of Thirty 연설을 통해 발표

- ① 사회의 근본적 변혁에 순수한 경제적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음.
⇒ 체제전환과정의 복잡성은 시장경제의 기원과 성장의 기획을 불가능하게 만들.
- ② 체제전환과정에 있어 해외원조의 기여는 제한적임.
- ③ 체제전환에 따라 국민생산의 감소, 실업의 증가, 물가상승, 급격한 평가절하를 피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이러한 현상의 반복과 심화를 방지할 수 있음.
- ④ 세부적인 개혁조치계획은 성공하기 어려움.
⇒ 주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
- ⑤ 제약적 거시경제정책에서 중립적 혹은 확장적 (재정흑자) 거시경제정책으로의 전환시점 파악하는 노력 필요
- ⑥ 가격자유화에 이은 가격충격(price shock)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설명되어야 함.
- ⑦ 광범위한 소유구조의 변동없이 경제구조조정을 달성하기 어려움.
⇒ 신속하고 광범위한 민영화 필요
 - 표준적 민영화(standard privatization)와 급속한 민영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 민영화의 목적은 정부수입의 극대화가 아닌 새소유주를 찾아주는 것임.
 - 민영화는 미시적 수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정부기구는 절차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외국자본의 참여가 중요하나,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⑧ 개혁에 따른 체제전환비용은 국민들간에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
 - 체제전환 비용이 정부에 전가되는 것은 문제
- ⑨ 외부로부터 필요한 것은 원조가 아니라 교역임
- ⑩ 개혁가는 개혁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함.

(첨부1)

체코 개관

- 국 명 : 체코공화국(the Czech Republic)
- 수 도 : 프라하(인구 : 117만명)
- 인구 및 면적 : 약 1,023만명('03) 및 78,864km²(한반도의 1/3)
- 14개 지역으로 구성 : Prague, Central Bohemia, Liberec, Hradec Kralove, Pardubice, Karlovy Vary, Plzen, South Bohemian, Usti nad Labem, Moravian-Silesian, Olomouc, Zlin, South-Moravian, Jihlava
- 민족구성: 체코인(90.4%), 슬로박인(1.9%), 독일, 폴란드, 헝가리인, 집시 등(4.8%)
- 종 교 : 카톨릭(26.8%), 프로테스탄트(1.2%), 후스파(0.97%)
-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 의회구성: 양원제(하원: 200명 및 4년 임기, 상원: 81명 및 6년 임기)
- 주요경제지표('04)
 - GDP : 1,070억불(1인당 10,487불)
 - 무역규모 : 수출 668억불, 수입 677억불
 - 경제성장률 : 4.0%

(첨부2)

주요 연표

- 1918년 Habsburg 제국붕괴 ⇒ 체코슬로바키아 건립
(합스부르제국 산업설비의 70%가 체코슬로바키아에 위치)
- 1939년 나치 독일 체코슬로바키아 점령
- 1945년 해방
- 1948년 체코공산당(KSC)의 무혈쿠데타 성공
- 1968년 프라하의 봄 및 소련의 진압
- 1970년대 Vaclav Havel, 반체제그룹(Charter 77)
- 1989년 벨벳혁명으로 공산정권 붕괴
- 1991년 민영화부(Ministry of Privatization), 민영화대상 기업목록 발표
- 1992년 제1차 민영화
- 1993년 슬로바키아와 분리
- 1994년 제2차 민영화
- 1996년 Vaclav Klaus 총리 체제전환 종료 선언
- 1997년 통화위기
- 1998년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설립
EU 가입협상 시작
- 1999년 북대서양주약기구(NATO) 가입
- 2004년 유럽연합(EU) 가입

(첨부3)

최근의 경제동향

가. 경제전반

- 2005년도 4.75%의 경제성장에 이어 2006-7에도 4.5% 정도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투자증가와 수출증대에 기인함.
 - 수출증가는 2004년 2/4분기부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교역상대국인 유로지역 국가들의 수입수요 증가에 따른 것임.
 - 체코 제품은 노동생산성과 품질의 증대에 따라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으며, 시장점유율도 높아지고 있음.
- 체코제품의 경쟁력강화는 코로나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자본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인프라투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나.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 압력은 코로나화의 강세, 소매상간의 경쟁, 완만한 임금인상에 따라 크지 않음.
 - 코로나화의 강세에 따라 2005년도에는 연평균 1.9%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

- 실업률이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임금과 연동된 공급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음.

다. 대외무역

- 수출호조로 무역수지는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 호조는 유럽연합과의 통합, 체코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체코에 소재하는 외국소유기업의 이익증가,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해외차입으로 투자순수입의 적자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소득이전(transfer)로 어느 정도 상쇄될 것임.
- 전체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2005년도 GDP 대비 4.6%에서 2006년 3.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라. 경제전망

- OECD는 2005년 단기 경제전망을 통해 2005년도에는 수출 증가에 힘입어 4.75%의 경제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
- 2006, 2007년도에는 수출보다는 주로 국내수요증가에 기인하여 4.5%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과 통화긴축이 예상됨.
-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기업환경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개선 등에 따라 경기침체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체코 주요경제지표>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0억코루나)	실질성장율 (95년가격기준)				
수출	1485.5	7.5	21.9	8.5	11.2	12.8
수입	1535.0	7.9	18.4	2.9	10.4	12.3
무역수지	-49.5	-1.3	0.4	5.1	0.1	-0.3
경상 GDP	2414.7	3.2	4.4	4.8	4.5	4.5
GDP 디플레이터	—	2.6	3.0	0.3	2.9	2.8
소비자 물가 상승율	—	-0.1	2.8	1.9	2.8	3.0
실업율	—	7.8	8.3	8.0	7.8	7.6
재정수지 (GDP대비, %)	—	-12.4	-3.0	-4.0	-3.6	-3.2
경상수지(GDP대비, %)	—	-6.3	-5.2	-4.0	-2.8	-2.1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78)